

| 사회적 대화 논단 |

‘정년연장’의 또 다른 이름 ‘세대갈등이란 프레임’을 거부합니다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 그러나 고정불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해결해나가고 싶은 사회문제이지, 양끝단에 서서 끝까지 세대 간 대립각을 세우고자 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소비할 사람도, 노동할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사라지는 인구절벽 사회가 예견되는 가운데, 다시 불붙기 시작한 정년연장 논의에서 소모적으로 청년이 소비되지 않길 바란다. 청년 그 누구도 정년연장의 또 다른 이름을 세대갈등으로 용인한 바 없다.

노동총량설, 세대 간 일자리 대체설이 우선적으로 부각되며,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측에 청년을 세우고 확증 편향적으로 논쟁을 붙이며, 청년을 갈등유발인자화 하는 것은 암울한 미래를 정해두고,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청년 문제를 ‘청년이 문제다’라고 규정하면, 한 세대를 지우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청년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청년 문제를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때문에,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왔던 영역을 발견하고, 이행기 청년이 사회안전망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은 형성되고 발전되어왔다.

대표적 사례로 국가건강검진을 들 수 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취업 상태의 20, 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전주시,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건강권 보장이라는 영역에서 배제되어왔던 청년의 삶에 주목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진입했어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확대되기에 이른다. 국가건강검진 영역뿐만 아니라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신청하게 된 사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년연장 문제 역시 ‘정년연장 = 세대갈등’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다. 어떤 정책이든 ‘대안은 대안으로서 존재한다’는 말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인빈곤 문제의 대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정년연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령사회의 해법이 정년연장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정년연장을 시행한 바 있다. 시행의 효과도 있었지만, 부의 외부경제 효과 역시 발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정년연장 대상자가 100명 늘어날 때, 청년고용은 평균적으로 22.1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의무고용제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정년연장 이후에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을 단순 세대 간 일자리대체설을 입증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의무고용제와 임금피크제의 영향으로 양 세대 모두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프레임 논쟁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환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편타당하게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획득한 정책이라도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정책 시행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세대갈등과 같은 감정대립의 프레임을 덧 씌우면 논의의 초점이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절벽사회에서는 청년세대도 부모세대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부모의 일자리, 자녀의 일자리를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도 부모세대도 아우성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정년연장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데 집중하기에 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년연장 도입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측도 또한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의 외부경제효과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모두 삶의 절박하고 절실한 과제 앞에서 있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자체가 상수가 아니라, ‘저출생 고령사회’로의 빠른 편입 속에서 쉽게 삭제되거나 보이지 않는 삶의 불평등 문제와 심화되는 격차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로의 삶의 위기와 긴급성을 살피지 않은 채, 각자 자기분위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방식의 논의는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는 방식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을 도입하는 과정을 다시 복기해보면, 정책적 지향점에 함몰되어, 미리 예견되는 문제가 분명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금 겪어야 하는 부의 외부경제 효과의 진통의 폭은 상당하다.

정년연장의 또 다른 이름을 ‘세대연대의 대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삶의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과 쉽게 삭제되는 빈곤한 노인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서로 나이주의로 인한 편견 앞에 청년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자체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소득, 주거, 건강 등의 결핍문제가 그 세대에서도 빈곤할수록 다차원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한다는 것 역시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정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연장을 이야기하며, 도입 시기와 업종별 접근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임금체계의 개편부터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까지 다뤄야 할 문제의 폭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갈등’만 부각시킨 채, 청년의 목소리도, 노인의 목소리도 모두 삭제시킨 상태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한계가 분명한 정년연장을 그대로 도입하는 최악

의 시나리오가 더 이상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장악하지 않도록 프레임 논쟁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정년연장 논의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정년연장이라는 논의를 시작으로 전환사회의 새로운 미래사회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회 불평등, 양극화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연대 지점을 찾기 위해 인구와 고용절벽 앞에서 서로의 삶의 결핍과 위기를 먼저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